

미세먼지 잇단 공습...근본 저감대책 시급

최악 미세먼지에도 경보 메시지만...시민 '건강 불안증' 커져
광주시, 노후 경유차 폐차 등 재탕 대책 탈피 총력전 나서야

미세먼지가 연일 광주의 하늘을 뿌옇게 뒤덮으면서 시민들의 '건강 불안증'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사실상 기존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이어서 현실적인 저감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22㎍/㎥까지 치솟으며 경보가 발령됐다. 지난 201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광주시는 이날 미세먼지 경보에 따라 정부 '국민재난안전포탈'을 통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PM-10) 주의보·경보 발령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날 하루 종일 미세먼지 탓에 답답하고 불안한 광주시민들의 마음과는 달리 광주도심에선 미세먼지를 일부나마 씻어낼 수 있는 살수차 동원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시는 이날 경보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황사는 초미세먼지(PM2.5)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에 덜 해롭기 때문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모두 초미세먼지 저감에만 맞춰져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2030 미세먼지 저감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829억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유럽수준인 18㎍/㎥까지 단계적으로 줄

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광주시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도 초미세먼지저감이 목표다. 이 계획은 초미세먼지가 76㎍/㎥ 이상일 때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작업시간 단축 조치 등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삼아 대응요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광주시도 이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5일 오후 4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대구시의 경우 지하수를 활용해 도로를 세척하는 클린도스시스템을 가동했고 살수차를 동원해 도심 곳곳에 물을 뿌렸다. 미세먼지 경보 안내 문자메시지만 보낸 광주시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을

주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 등도 있다"고 조언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초미세먼지가 더 건강에 해로운 뿐이지 미세먼지가 괜찮은 건 아니다. 최소한 매연을 내뿜으며 광주도심을 활보하는 차량에 대한 조치라도 강화했으면 한다"면서 "5월달까지 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주시에서 전반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기 순환을 고려하지 않는 광주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성영 전남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도심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인 광주는 공기흐름이 정체돼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황사 등 오염물질이 갇히는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면서 "특히 무작위로 세워진 고층 아파트들이 바람 흐름을 막고 있어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회색도시 광주 지난 15일 광주시 서구 유덕동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이 미세먼지(PM10)로 뒤덮여 뿌연 회색빛을 띠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중년가장 가정폭력

무안서 흉기 찢린 아내 숨겨...광주·전남 부부 비극 잇따라

중년 가장들의 가정 폭력이 부인의 목숨을 빼앗는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부분 가정폭력이 남편들의 주도로 이뤄지는데,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치지 않고 목숨을 빼앗는 극단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40분께 무안군 삼향읍에 사는 A(여·56)씨가 흉기에 찢린 채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남편 B(59)씨는 의식을 잃은 아내 A씨를 차에 태워 직접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남편 B씨도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 약물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 도착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B씨의 차에서 A씨를 찢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하고 B씨가 아내를 차에서 찢른 뒤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9시 17분께에는 목포시 옥암동 한 아파트에서 C(60)씨와 아내 D(여·58)씨가 흉기에 찢려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 D씨는 작은방 입구에서, 남편 C씨는 침대 옆에서 발견됐으며 옆에 흉기가 놓여 있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지난 1월께 뇌수술을 받은 이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날도 아내에게 폭력과 함께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에서도 중년 부부들의 크고 작은 가정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에는 광주시 북구 한 주택에서는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남편(64)이 아내(64)를 흉기로 찢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경 광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가부장제의 그늘 속에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하는 남성들이 많다"면서 "뿌리깊은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가정폭력의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폐교환기 상습 절도 23차례 턴 30대 구속

광주광산경찰은 16일 광주와 나주 등 주유소와 세차장 등의 지폐교환기 잠금장치를 열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6일 새벽 0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주유소의 지폐교환기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두달동안 광주, 나주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셀프세차장과 주유소 지폐교환기에 현금이나 보관돼 있다는 점을 노리고 드라이버 등을 지폐교환기 틈새에 넣어 넣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서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학대

머리채 잡는 영상 확보
광주서부경찰 수사 나서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해 나갔다.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여성·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아 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 13일 경찰에 접수됐다.

평소와 다른 아이의 행동에 의구심을 느낀 부모가 경찰 112상황실, 전문기관에 학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 20대

여성 교사가 피해 아동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2개월 치 CCTV 영상을 분석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증거 분석 뒤 교사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아 학대 의혹을 받는 이 여성 교사는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7일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서부경찰, 서구청 아동복지과 직원 등 포함된 8명의 담당자들이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동료 살해·시신 소각 미화원 범행 동기는 '거액 채무'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환경미화원의 범행 동기는 거액의 채무 때문이었다고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3부는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는 너 등의 혐의로 전주시 환경미화원 이모(4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검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고 살인

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생전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빚졌으며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이혼 후 혼자 살던 A씨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으나 2~3년 새 급격히 가까워졌다"며 "범행 당시 두 사람은 금전적 갈등이 극에 달했었고, 이씨가 범행 직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 등을 확인,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음=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수용자 요청 없이도 호송 뎀 수갑가리개 사용해야"

인권위, 인권침해 개선 권고

구치소에서 호송 중인 교정시설 수용자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 가리개·마스크 등 보호용품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구치소 수용 중인 2016년 6월 1일 부당하고 구제심판 출석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조사에서 "구치소에서 출발해 중노위에 도착할 때까지 A씨가 수갑 가리개를 사용토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용자가 가급적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할 의무가 구치소에 있다며 구치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교도관들은 A씨가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노출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절도행각 30대, 교도소 동기 명의 개통한 휴대전화로 '달미'

○~재개발구역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교도소 동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개설해 쓰다가 경찰에 달미.

○~1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8)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북구 임동 재개발구역에 있는 이모(65)씨의 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은 김씨가 교도소 동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통화기록과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붙잡았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주민들이 이사를 앞두고 단단속을 허술하게 할 것으로 생각돼 재개발구역에 들어갔다"고 진술.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개> ※라고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17298	1	북구 서문대로622번길7, 304동 1층 103호	아파트	211,000,000 211,000,000	
2017타경 18024	1	북구 인선로47-4, 2층 201호 [오치동, 오치동도나우아파트]	아파트	132,000,000 132,000,000	
2017타경 18260	1	북구 서강로155, 302동 13층 1304호 84.96㎡	아파트	163,000,000 163,000,000	
2017타경 18611	1	화순군 화순읍 앞메로86, 402동 4층 404호 [사리4차아파트]	아파트	95,000,000 95,000,000	
2017타경 19324	1	북구 자이로45, 2층 2층 201호 84.47㎡	아파트	132,000,000 132,000,000	2018타경60862(중복)
2017타경 68173	1	서구 황정동 366-19 금호타운 302동 15층	아파트	190,000,000 190,000,000	
2017타경 10976	1	화순군 동북면 유천리 191 263㎡ 화순군 동북면 동북유천길 152 82.23㎡ 제1외 청교 등 19.6㎡ [물건번호1:김부원3/9, 서용선2/9자본전부, 자본매각]	대 단독주택	27,477,040 27,477,040	일괄매각, 제1외 유수목제외, 목욕1 유수목제외, 목욕1 -5현황잡종지또는 휴경종인전, 목욕7 현황토지임야,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상근린공원지속
2017타경 14459	1	서구 쌍촌동 458-3 2367㎡	전	853,926,000	일괄매각, 타인소
		동소 458-5 605㎡	전	853,926,000	유수목제외, 목욕1
		동소 458-6 340㎡	전		-5현황잡종지또는
		동소 458-10 291㎡	전		휴경종인전, 목욕7
		동소 480-7 496㎡ 동소 산81-3 1983㎡	전 임야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상근린공원지속
2	동소 480-10 221㎡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상근린공원지속특침]	전	63,206,000 63,206,000	현황잡종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지/임야/전답]

● 광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17540	2	북구 매곡동 산90-1 10㎡ 동소 산90-5 138㎡ 동소 산90-6 149㎡	임야	83,433,000 83,433,000	일괄매각, 축합포 채 [대나무가자생 하여죽림들이루고 있음]
2017타경 17649	1	곡성군 일면 창정리 277-14 179㎡ [김구순 위4번가처분(2014. 11. 24등기)]은말소되 고 임대수익이안수하며만약사해행위취소판 결이확정되어 소유권이말소되는경우에는매 수인은소유권상실할수있음]	대	6,444,000 6,444,000	건축물대장상타인 소유로등재되어있 는제외건물매각 제외
2017타경 18482	1	화순군 동북면 안성리 산53 8916㎡ [일부부 록약2㎡, 길107m정도의임도이용중]	임야	14,265,600 14,265,600	
2017타경 18697	1	영광군 군남면 용정리 472-1 3300㎡	삼층주택	18,150,000 18,150,000	타인소유제외사전 물제외
2017타경 18925	1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103 1273㎡ [신호철 개명전:신갑술]지분1/4전부, 농지취득자격 증명요, 현황휴경중임지	전	7,956,250 7,956,250	건축물대장,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1 회에만한
	2	동소 106-1 575㎡ 제외의 수목 [감나무등] 동소 106-3 172㎡ [물건번호2:신호철]개명 전:신갑술]지분1/4전부, 제외의수목포함]	대	6,922,700 6,922,700	일괄매각, 자본매 각, 공유자우선매 수권행사1회에만 한
2017타경 19119	1	화순군 늘주면 남정리 251 83㎡ [건물은화 재로인한열심론해대안남아있음]	대	15,355,000 15,355,000	제외건물 [창고]
2017타경 67729	1	곡성군 독과면 리리리 266 68㎡	전	16,184,000 16,184,000	현황주자장
2017타경 68012	1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1086-6 1726.4㎡	답	25,896,000 25,89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습지
2017타경 17427	1	서구 쌍촌동 905-53 299㎡ 동소 905-53 1,2층각168.95㎡ 3층19.08㎡ [등기사항전부등명서상용도노유지시설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근린시설로용도변경되었 으며점포및사무실, 주택등]	대 주택지 설	601,356,400 601,356,400	일괄매각

● 광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기대수익고인인 매각결정가이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할 때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하여 주고 이를 배상할 매각대금에 상당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40주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우선신고 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매수보증금의 인입으로 실종되는 경우 매수보증금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매수보증금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 기입액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금액으로 본다.

3. 매각기일 : 2018. 5. 31. (화) 10:00

3. 매각결정가 : 2018. 5. 31.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에 위치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명 등을 기재하고 입찰하여 보증금을 통해 입찰보증금에 남아 입찰보증금의 10%를 납입한다. 입찰신청은 화요일(매각일의 1일 전)까지의 영업시간에 공표된 매각물건의 자가인수 또는 현금으로 판매하거나 지급보증취득계약을 체결한 문서(입찰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서작성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방에서 부인이 영문으로 관공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함을 최고기대수익고인으로 청고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차별한 상대를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기대수익고인과 자선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은 매각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로 가격으로 입찰한 사함을 대하여 매각결정가이하의 매각허가 여부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최종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7개 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실시한다. 다만, 매각허가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총선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정허가, 비보증 납부하면 대금지급기한지 위주요하다. 따라서 매각허가 실시하여야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당권, 기입부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당권이나 기입부등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본제외 지방공채를 기입한 후 등본제외 지방공채 및 등본제외 지방공채 지서를 준비하고, 국민주택공채발행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각허가 위 주된, 출찰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 납부완료에도 불구하고, 지주자, 소유자 또는 매수인 등은 매각대금에 부동산 기입부등 기입부등 부당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대금 또는 선거권등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주된 주민등록번호인고인인 매각허가 주주하고 있는 입찰자이나, 사당 지당권등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수인 때에는 그 지방공채를 매수인이 매수하여야 하는 경우 주지 않을 수 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금 미납 또는 미납된 경우를 알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보증금 미납 또는 미납된 경우와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이니 선본공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함을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장장을 반드시 입찰하고 유효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요구하는 농지 등의 경우에는 최고기대수익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광고된 물건에는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에 불응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일기에 해당되는 물건의,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개런의 공고나 인터넷에 의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 납부후에 잔여 매각허가, 지주자, 소유자 또는 매수인 등은 매각대금에 대하여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한다.

매각일 공고의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섹션]

※ 대법원 헌법재판부에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국민연방의 위하여 또는 제공한 것으로서, 혹은 그 중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로써 매각불가 신청이나 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열람하는 물건의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이의서 제출하여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매각대금에 대한 취소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1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덕성